

돼지 전염병 박멸과 공동방역 사업단의 역할



박 근 식 부회장
(대한수의사회)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피땀흘려 이룩한 한강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는 어느 한 세대가 주축이 되어 희생과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결과이다.

한국 양돈산업 또한 그러하다. 그간 한국양돈이 역사는 일천하나 그 짧은 기간에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 식량 공급 차원에서 크게 기여하여 왔다. UR에서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양돈산업도 국제적으로 무한 경쟁을 맞게 되었고, 금년 7월부터 일부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은 완전 개방을 맞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농림부에서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을 수립 확정하고 금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음은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고 양돈산업분야나 수의분야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다.

필자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던 바와 같이 돼지질병의 안전방역은 양돈생산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만이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국제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무병돼지(無病豚)만이 돈육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최종 산물인 돼지고기의 안전성(安全性: Safety)을 확보하여 국내의 소비자에게 자랑스럽게 공급하여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양면성(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론으로 양돈인과 수의사가 재무장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있다.

정부에서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중 양돈 부분을 요약하면, 근절대상 질병을 악명높은 돼지콜레라(HC)와 오제스키병(AD), 그리고 전염성 위장염(TGE) 3종을 정하여 목표를 돼지콜레라는 2001년까지 한국을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하고, 오제스키병은 2003년에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추진 전략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생독백신을 전국 돼지에 일제히 예방 접종하여 이들 전염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단계는 이들 질병을 청정화 실시 단계로 HC의 경우는 1단계에서 사용하던 HC 생독백신을 2단계에서는 유전자 재조합백신(사독백신)으로 대체하고, AD의 경우는 감염돈군을 색출하여 전두수를 도태하여 청정화 시킨 다음, 마지막 단계인 제3단계는 백신 사용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검사를 강화하여 근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근절 되었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단계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하되, 중앙공동방역사업단 밑에 시·도 공동방역 사업단, 그 밑에 시·군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의 3단계를 조직·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직에서 생산현장에서 방역과 근절을 위한 기초 단위는 시·군 지역공동방역사업단으로서 이

는 기본 실시단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단이다.

중앙은 정책, 제도, 기술, 교육 등, 시·도단위 사업단은 최일선 시군단위 사업단의 행정지원과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 간의 가축의 이동 통제 등을 지원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

공동방역사업단의 운영요령도 마련하여 각 단계별 사업단의 업무한계와 자금조달방법, 업무집행을 구분하였고, 각 사업단에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종 정부의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게 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라 보상금도 신고의 성실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등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계획한 기본 골격과 전략은 그 어느때보다 의욕적이고 실행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들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때 소요예산이 뒷받침 되느냐가 문제된다. 정부 예산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평년 정부방역비보다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아직 외국의 박멸계획 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10분의 1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어, 이에 참여하는 양돈장이 자체방역을 위해서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따라서 정부예산과 자체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동방역사업단에서 세부 실천계획과 구체적인 지침 및 참가 농장 및 참가자의 실천행동강령까지 마련되어, 참여자에게 부여된 임무수행을 그대로 따르면 되도록 하는 것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계획과 행동요령이 구체화됨으로서 소요예산도 산출될 수 있다. 금년도 1차년도이기에 수행하는 동안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한 나라의 가축전염병의 근절 시행은 축산물의 완전 개방화시대에서는 교역국간과의 긴밀한 유대와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수역국(國際獸疫局 : OIE), 국제식량기구(FAO)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여 한국에서의 가축전염병 박멸계획 추진에 협력을 받아 국제방역과도 연계되어야 하며, 국내 방역에서는 근절 목표질병의 발생 조기신고(早期申告)와 신속진단 그리고 초동방역(初動防疫)의 3단계가 가장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절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시군 공동방역실시단에서는 HC와 AD의 증상을 그 지역 양돈장 경영주에서부터 사양 관리인에 이르기까지 알려(교육), 이러한 증세를 나타내는 돼지를 발견 즉시 신고하면서 인근 병성감정 기관에 의뢰하고, 의뢰받은 곳에서는 신속한 확진과 동시에 방역시행부서인 농림부, 시도, 시군은 초전에 박멸하는 3단계를 철저하게 이행한다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방역실시단에서는 이 세가지 원칙만 이루어지면 조기에 박멸사업을 달성할 수 있고, 세계 만방에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이 없는 나라로 선포하여 인정을 받았을 때 한국 양돈산업은 경쟁력을 쉽게 갖출 수 있다. 악성전염병을 없앤 다음 단계는 마음 놓고 생산성 저해 질병들인 소모성 질병을 지역의 양돈 전문수의사와 연대하여 또 새로운 대책을 세우면 우리나라도 덴마크보다 앞선 양돈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간의 잘못들은 모두 덮고, 작은 성의로 신고하고 성실하고 빠른 진단,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 나라 축산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작은 것은 쉬운일이다(Small is possible).

자, 이제 모두 협동하여 시작합시다.

21세기의 세계적인 양돈국가를 향하여 모두가 공동방역사업단의 일원이 되어 참여합시다.